

#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 정부의 육아정책과제」를 주제로 12월 3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창립 2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총 12개의 육아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 육아시설 이용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소외 계층의 양육받을 권리 보장을 차기정부의 최우선 육아정책 과제로 제안하였으며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이용이 아닌, 가정내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도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 파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취업보육아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형은, 1)지역내 거점센터로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할 국공립 시설과 2)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3)가격규제 예외 시설(자율화 시설)의 3개 유형으로 재개념화할 것을 제안하고, 육아시설 이용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공립시설과 저소득층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육아지원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 육아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포함한 보조인력 등,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 향후 5년간 이러한 육아정책 과제가 단계적으로 수행될 경우, 0~2세 영아의 40% 정도가 서비스 수준이 관리되는 육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5세 유아의 90%가 공

공성이 확보된 기관에서 질적인 교육과 보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육아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I.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차기정부 역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정책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보다 진전되고 효율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함.
- 육아정책은 미래인적 자원의 건강한 육성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그리고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정책으로서 범정부적 주목을 받아왔음. 향후,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꾀하려는 시급한 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중장기적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차기정부 육아정책 시행 5년간 보다 선진적 육아정책과제의 수행으로 0~2세 영아의 40% 정도가 서비스 수준이 관리되는 육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5세 유아의 90%가 공공성이 확보된 육아시설에서 질적인 교육과 보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육아선진국 진입을 기대함.

####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 지난 5년간 정부는 육아지원정책 추진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육아시설 이용 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전국규모의 기초조사를 실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육아정책방향과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차기정부 역시 이 3대 핵심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그 성과의 도출을 기대함.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의한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서비스 수준의 질적 수준 제고
- 육아시설 이용비용의 정부부담 수준 확대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집중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수준, 이용자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어려운 현실임.
- 차기정부의 육아정책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수준, 기타 정부관여의 수준에 이르는 제 쟁점에 대해, 보다 진보적 입장의 정책선택과 합의를 이끌어 육아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함.

###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 육아지원의 외부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등의 사회적 절박성 때문에 대다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정책 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 현실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의 선별적 지원정책(소득별 차등교육비, 차등보육료)을 기초로, 보편적 지원정책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보편적 지원프로그램은 추진되지 못함.
- 현재 보편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의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을 뿐,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의 추진도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육아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동, 즉 이용자별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지원이 더욱 긴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수요자(아동) 지원방식과 공급자(시설) 지원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중장기적 육아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요구됨.

###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 지난 1980~90년대의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의존 형 정책추진 결과, 전체 육아시설 이용 영유아 가운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각각 11%와 22% 수준임.
- 육아지원의 보편성과 공공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 육아지원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 육아시설 확충이 급선무라는 주장과 기존의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립·민간 육아시설의 관리와 육성 정책이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 육아시설, 특히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이용가격 규제정책의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가격자율화 정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간, 전문학자간, 현장종사자간, 심지어 육아시설 이용자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됨.
- 육아서비스 이용가격,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가격자율화는 육아지원의 공공성 제고정책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가격자율화는 육아서비스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는 육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가격자율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격자율화 정책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음. 유치원의 가격자율화는 민간보육시설 가격규제 영향으로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기보다는 유치원별 유사한 이용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자율화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가격자율화여부에 대해 차기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일관성 있게 육아지원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그 성과(접근성 확대, 서비스 질의 제고, 이용료 부담의 경감과 이용가격의 안정화 등)를 도출할 것을 기대함.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 정부의 육아서비스 관리감독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자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정부개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의 최소화와 가격자율화 등을 병행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과 이에 반하여 육아서비스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됨.
- 육아재정 확대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행정업무 과잉으로 인한 행·재정적 폐해의 감소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차기정부는 육아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관여 대상과 관여 수준을 명확히 결정하여 정부 관여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여 대상과 수준을 5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을 기대함.

**3. 육아지원 우선과제 논의의 필요성**

**가. 육아지원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 국가의 육아지원은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수긍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해 세부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우선과제 또는 핵심과제 선택이 불가피함.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급격한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 수십 년간 요보호 아동 대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행된 육아지원 정책의 관행으로 인해 진보적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동의가 여전히 어려움.
- 사회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회통합에 접근할 수 있는 육아지원 우선과제의 선택과 이행이 긴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오랫동안 국공립과 사립/민간 부분의 비형평적 요소와 지원 수준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용이하지 않음.
- 이해당사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육아지원 대상과 지원방식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들이 유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수많은 육아지원 정책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하나, 차기정부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 즉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우선과제로 선택하여야 함.
- 육아지원이 더욱 절실한 계층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우선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유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우선과제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 및 논의 범위**

- 지난 2년간 육아정책 연구과제 수행 결과로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축적된 데이터와 현행 육아정책과제들을 연구자들이 공동 토의과정을 통해 검토하면서, 우선적이며 핵심적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육아정책과제들을 일차 선정함.
- 일차 선정된 육아정책과제들을 기초하여,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육아정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정책 수요자, 즉 육아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서비스 공급자인 유치원 원장과 시설장, 교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정책과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함.
  - 특히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부모와 그 외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을 구분하여 구성함.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에 참고하였음.
- 일차 선정된 육아정책과제들을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토의과정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로 보완과정을 거쳐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특히 현 정부의 육아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 과제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진 토의와 의견조사를 통해 검토하였음.

- 현란한 육아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간 데이터에 기초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지원의 합리성 제고 원칙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본 원고에서 제안하는 육아정책과제의 범위는 학령전 아동,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정책과제에 한함. 육아정책과제 중에서 특히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관련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제안함.

## II.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창립2주년을 맞아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에 대한 부모, 전문가, 공무원, 원장,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각 집단별 의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제시함.

### 1. 부모

#### 가. 조사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100명: 유치원 이용 부모 50명, 보육시설 이용 부모 50명

〈표 II-1〉 시설유형 및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설유형		
공립유치원	25	25.0
사립유치원	25	25.0
국공립보육시설	5	5.0
법인보육시설	2	2.0
직장보육시설	2	2.0
민간개인보육시설	24	24.0
가정보육시설	5	5.0
미상(보육시설)	12	12.0

####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 1) 조사 내용

-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정책과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 향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 2) 조사 절차

- 전국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지역 및 기관 유형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할 당하여

유치원 25개원, 보육시설 25개소 선정하고 50개 시설에 두 명씩의 부모 조사를 의뢰함.

- 부모 조사는 전화로 각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의뢰하여 질문지를 우편, e-mail, FAX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발송하고 회신 받도록 함.

**다. 조사 결과**

**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 부모들에게 <표 II-2>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의 순이었음. 그 외에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유치원 종일제 확대 등도 긍정적으로 인식함.
- 부모들은 대체로 비용 지원의 혜택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외 정부 정책을 통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평가함.

<표 II-2>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54(55.0)	11(12.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3(13.0)	9( 9.0)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6( 6.0)	28(29.0)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4( 4.0)	6( 6.0)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0( 0.0)	5( 5.0)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10(10.0)	14(15.0)
유치원 종일제 확대	8( 8.0)	15(16.0)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3( 3.0)	7( 7.0)
계	98	95

<표 II-3>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26(52.0)	6(12.5)	28(58.3)	5(10.6)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0(20.0)	8(16.7)	3( 6.3)	1( 2.1)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5(10.0)	13( .1)	1( 2.1)	15(31.9)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2( 4.0)	2( 4.2)	2( 4.2)	4( 8.5)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0( 0.0)	4( 8.3)	0( 0.0)	1( 2.1)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2( 2.0)	2( 4.2)	8(16.7)	12(25.5)
유치원 종일제 확대	5(10.0)	12(25.0)	3( 6.3)	3( 6.4)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0( 0.0)	1( 2.1)	3( 6.3)	6(12.8)
계	50	48	48	47

**2)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 부모들에게 <표 II-4>의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함.
- 부모들은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들었음.

<표 II-4>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46(46.0)	8( 8.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24(24.0)	21(21.0)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9( 9.0)	26(27.0)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9( 9.0)	13(13.0)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1( 1.0)	6( 6.0)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2( 2.0)	7( 7.0)
유치원 종일제 확대	5( 5.0)	9( 9.0)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3( 3.0)	6( 6.0)
기타	1( 1.0)	2( 2.0)
계	100	98

- 이용 기관 별 큰 차이는 없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비용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게 나타나며, 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

〈표 II-5〉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26(52.0)	2( 4.0)	20(40.0)	6(12.5)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5(30.0)	8(16.0)	9(18.0)	13(27.1)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4( 8.0)	17(34.0)	5(10.0)	9(18.8)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2( 4.0)	9(18.0)	7(14.0)	4( 8.3)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0( 0.0)	3( 6.0)	1( 2.0)	3( 6.3)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0( 0.0)	3( 6.0)	2( 4.0)	4( 8.3)
유치원 종일제 확대	2( 4.0)	5(10.0)	3( 6.0)	4( 8.3)
보육시설의 야간,24시간 보육 등 확대	1( 2.0)	1( 2.0)	2( 4.0)	5(10.4)
기타	0( 0.0)	2( 4.0)	1( 2.0)	0( 0.0)
계	50	50	50	48

3) 자녀 양육지원 관련 필요 정책

- 부모들에게 〈표 II-6〉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답하도록 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부모들은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응답함.
- 그 밖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I-6〉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40(40.0)	15(15.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3(13.0)	15(15.0)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8( 8.0)	4( 4.0)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14(14.0)	14(14.0)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0( 0.0)	3( 3.0)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 (휴직수당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11(11.0)	17(17.0)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10(10.0)	16(16.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3( 3.0)	13(13.0)
기타	1( 1.0)	1( 1.0)
계	100	98

- 부모들은 양육 지원 정책 요구사항 중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II-7〉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20(40.0)	7(14.3)	20(40.0)	8(16.3)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7(14.0)	9(18.4)	6(12.0)	6(12.2)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3( 6.0)	4( 8.2)	5(10.0)	0( 0.0)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7(14.0)	6(12.2)	7(14.0)	8(16.3)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0( 0.0)	0( 0.0)	0( 0.0)	3( 6.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 (휴직수당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5(10.0)	10(20.4)	6(12.0)	7(14.3)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5(10.0)	6(12.2)	5(10.0)	10(2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2( 4.0)	7(14.3)	1( 2.0)	6(12.2)
기타	1( 2.0)	0( 0.0)	0(0.0)	1( 2.0)
계	50	49	50	49

라. 요약

-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라고 응답함.
- 부모들은 대체로 비용지원의 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정부 정책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함.
- 다수의 부모들은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서,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을 들었음.
-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책으로 육아시설 이용 비용 지원과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등 비용 지원 정책과 육아시설 확충 정책을 들었음.

##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 가. 조사 대상

- 조사 대상자는 전문가 51명, 공무원 62명, 유치원 원장·보육시설장 93명, 교사 113명으로 총 319명임.

〈표 II-8〉 의견조사 대상자

단위: 명

구분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유아교육	28	27	49	63	167
보육	23	35	44	50	152
계	51	62	93	113	319

#### 1) 전문가

- 15개 관련 학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아 총 1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했고 이 중 51명의 응답지를 회수함.

〈표 II-9〉 설문에 참여한 학회 회원

단위: 명

학회명	응답자 수	
유아교육 관련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2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4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5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5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3
	한국유아교육학회	5
	한국육아지원학회	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0
계	28	
보육 관련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3
	한국보육정책학회	1
	한국보육지원학회	5
	한국보육학회	2
	한국아동권리학회	3
	한국아동학회	7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
계	23	
전체	51	

#### 2) 공무원

-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자 각각 1명씩을 지역규모나 지역안배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임의표집함.
- 유아교육이나 보육 담당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유아교육이나 보육은 아니지만, 이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육아정책을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 추가
- 총 163명(유 81, 보 82)에게 설문지를 송부, 68명(유 27, 보 35 기타 6)이 회신함.
- :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설문조사지 기타 6명은 제외하고, 총 62명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3) 유치원 원장·보육시설장

-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 연합회에 의뢰
- 사립유치원 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의뢰하고, 기타 임의표집으로 49명을 조사함.
- 국공립 보육시설은 한국보육시설총연합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분과에 의뢰함.
- 법인,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은 한국보육시설총연합회에 의뢰하고 기타 임의표집을 통해서 전체 44명의 의견을 조사함.

〈표 II-10〉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기관유형	설립유형	응답자 수	계
유치원	국공립	31	49
	사립	16	
	미상	2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25	44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16	
	미상	3	
계			93

4) 교사

■ 유치원 교사

-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표집을 의뢰, 사립유치원 교사는 개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의뢰하여 총 62명의 교사 의견을 조사함.

■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노동조합에 표집을 의뢰  
 - 부족분은 시·도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시설 명단을 활용하여 표집, 총 50명의 교사 의견을 조사함.

〈표 II-11〉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기관유형	설립유형	응답자 수	계
유치원	국공립	33	62
	사립	29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25	50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25	
계			112

단위: 명

나. 조사 내용

현재 시행중인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다. 조사 결과

1) 계속 추진되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중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표 II-12〉와 같이 요약됨.

〈표 II-12〉 계속 추진이 필요한 현행 육아지원정책

단위: %

정책 내용	유아교육(n=167)	보육(n=152)
	계속 추진필요	계속 추진필요
<b>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b>		
·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71.3	11.2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 시설)	22.2	59.2
·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55.7	15.1
· 사립유치원·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	28.7	26.3
· 농어촌 공립유치원차량지원/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46.7	23.7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10.2	43.4
·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지원	26.3	9.2
·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11.4	34.9
<b>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b>		
· 영아 기본보조금	14.4	33.6
·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17.4	31.6
· 만5세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51.5	41.4
· 장애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26.3	40.1
·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	28.1	32.9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8	27.0
<b>유아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b>		
·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16.8	31.6
·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28.1	23.7
<b>유치원·보육시설 질 제고 정책</b>		
· 기관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36.5	40.1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40.1	36.8
<b>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b>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7.8	7.2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6.6	6.6

〈표 II-13〉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집단별 의견

단위: 명

계속 추진 정책과제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51)	교육 (28)	보육 (23)	전체 (62)	교육 (27)	보육 (35)	전체 (81)	유치원 (42)	보육 시설 (39)	전체 (112)	유치원 (62)	보육 시설 (50)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지원	17	13	4	31	23	8	44	43	1	43	40	3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22	10	12	20	5	15	37	7	30	40	16	24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 수당 지원	18	13	5	21	18	3	30	21	9	45	41	4
보육행정 시스템구축 사업	13	7	6	19	1	18	28	4	24	19	5	14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6	4	2	9	4	5	23	19	4	19	17	2
기타보육 (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지원	13	6	7	15	3	12	23	3	20	18	7	11
영아 기본보조금	17	9	8	11	2	9	20	5	15	17	8	9
차등교육비 보육료지원	15	7	8	15	4	11	24	11	13	17	7	10
만5세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27	16	11	28	14	14	39	25	14	42	32	10
장애아 무상교육·보육지원	21	11	10	20	6	14	31	15	16	28	14	14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지원	14	7	7	16	6	10	37	19	18	26	15	11
농어업인 자녀영유아 양육비지원	13	6	7	11	3	8	21	8	13	16	6	10

〈표 II-13 계속〉

단위: 명

계속 추진 정책과제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51)	교육 (28)	보육 (23)	전체 (62)	교육 (27)	보육 (35)	전체 (81)	유치원 (42)	보육 시설 (39)	전체 (112)	유치원 (62)	보육 시설 (50)
보육시설 물리적환경 개선 사업	15	8	7	6	1	5	26	4	22	14	6	8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6	10	6	24	15	9	23	16	7	28	16	12
기관 질 관리사업 (평가인증, 장학 등)	27	16	11	24	15	9	23	16	7	28	16	12
교사자격 관리/보수 교육 강화	27	17	10	23	13	10	32	14	18	31	18	13
영유아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11	5	6	20	9	11	35	19	16	33	22	11
여성농업인 가정양육비 지원	7	5	3	3	0	3	3	0	3	7	6	1

2)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제안

■ 유아교육 전문가

- 가정 양육 지원 강화
-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 직장 여성의 육아지원제도 강화
- 유치원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 지나친 교육열 자제와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 농어촌 육아지원강화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 **보육 전문가**

- 교사자격제도 개선
- 교사처우개선
-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 보육료 자율화
- 보육료 지원 확대
-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국공립유치원 대폭증설
- 공공성 강화
-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자격 기준 개선

■ **공무원**

-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정책
- 유치원의 의무 취학화 또는 공교육화 정책
-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
- 유치원·보육시설 기관 질 관리 강화
-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사립유치원 감사의 법적 제도화

■ **유치원 원장**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 교사처우개선
- 의무교육/무상교육 실시
- 재정 지원 확대

■ **보육시설 시설장**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 유치원·보육시설 공공성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 교사처우개선
- 재정 지원 확대
- 각종 제도, 규칙의 유연성 강화 및 업무, 서식 등 간소화

■ **유치원 교사**

- 가정 양육 지원 강화
-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 교사 복지 정책

■ **보육교사**

- 가정 양육 지원 강화
-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 교사 복지 정책

라. 요약

- 유아교육 전문가 및 공무원, 유치원장 및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정책은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비 지원 정책임.
  - 그 외 계속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립유치원교사 학급 담임수당 지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농어촌 공립유치원 차량지원과 함께 유치원 질제고 정책(질 관리 사업, 교사자격관리 및 보수교육강화)임.
  - 응답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관리와 유치원 질 관리 사업 등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을 가장 지속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공무원과 현장관련자들은 유치원 종일제 지원, 학급담임수당 등 유치원 운영지원 정책을 많이 지지함.
- 보육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보육시설장, 교사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국공립·법인·장애·영아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함.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사업, 평가인증 등 보육시설 질 관리 사업, 그리고 영아기본 보조금 등 각 보육료 지원정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지됨.
  -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보육시설 질제고 정책을, 공무원은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을, 보육시설장은 행정시스템과 함께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보고 있음.
  - 보육 관계자들은 보육시설 질 관리 사업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차등보육료지원 등을 꼽았음. 특히 질 관리 사업은 재정지원과 연계를 하고 평가인증 서류를 간

소화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함. 이 밖에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강화 및 법인화 실시, 무상보육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봄.

-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현장 관련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제고와 교사자격 강화, 재정지원의 확대,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교사처우개선,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공공성 강화, 가정양육 지원강화 정책 등을 지적함.

### Ⅲ.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과제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6개 영역, 12개의 육아정책과제를 선정함.

- 6개 영역은 영유아 최우선 기본관(생존·보호)의 보장, 소외계층 지원, 가정양육과 취업모 지원, 육아시설 재개념화, 육아비용 지원 체계의 합리화, 육아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영역임.
- 12개 육아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가. 제안 배경

- 차기정부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련 안전환경 조성을 육아정책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수행하여 미래인력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집중해야 함.
- 우리나라 영유아의 대다수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상태가 미흡한 수준임.

- 육아지원시설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의한 사고, 실내외 놀잇감에 의한 사고, 영아들의 질식사, 통학버스 관련사고, 아동학대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안전사고는 우리나라 아동의 사망과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개인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동의 사고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1996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시작됨.

- 1996년 ‘아동안전육성 종합대책 시안’ 발표(보건복지부): OECD가입 이후, OECD에서 요구하는 아동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실천방안 없었음.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적 문제차원에 머물던 아동보호를 사회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마련함.

- 2003년 어린이안전점검단 설치(청와대): 각 부처의 아동 안전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각 부처에서 아동의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부처가 없는 점을 문제삼아 현 참여정부에서 81회 어린이날을 기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삼고, 2007년까지 어린이사고를 절반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어린이안전점검단’을 청와대 내 비상설기구로 설치함.

- 2003년 6월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총 76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76과제에서 어린이제품안전대책 23개 과제를 추가하면서 총 99개 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으나 각 부처의 업무 중복과 혼선으로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유아가 육아지원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그림 III-1] 국가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비교

나. 세부 과제

1) 아동 안전 종합대책 수립

- 2003년에 수립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추진기간의 종료와 함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는 아동 안전사고 부분까지 포함한 아동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 육아지원의 최우선과제로서 종합적인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아동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기구들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함.
  - 현재 산재되어 있는 아동안전 관련법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아동 안전사고 관련 통계수집 및 분석,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실시, 육아지원시설의 안전 환경 관리감독,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안전사고 관리 사업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안전관리 사업별 평가가 필요함.

- 아동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3)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육아시설과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내실있는 아동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함. 아동과 유아 교육·보육 종사자,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있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함.
  - 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매체 개발·보급
  - 유치원·보육시설 안전교육 지도와 안전성 평가 실시
  - 유치원·보육시설 아동 및 부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실화
  - 유치원·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수 교육에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
  - 어린이 전문 안전관리요원 교육과 양성
-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과 기타 아동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함. 또한 육아시설 주변 환경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함.
  - 육아시설 안전환경 구성을 위한 안전표준모델 및 세부지침, 보급, 관리
  - 육아시설 주변 환경의 상시 안전관리 필요
- 가정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예방 프로그램 필요함
  - 어린이 안전사고 60% 이상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내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인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육아시설과 가정에서의 아동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리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함.
  - 지역사회의 병원, 소방서, 경찰, 구청, 육아지원시설,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보건 및 간호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가. 제안 배경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미흡함.
- 장애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음.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다니기 위하여 1~2시간의 통학시간을 감수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장기체류하여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제도상으로는 장애영유아 부모가 원할 경우 어느 기관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조건을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표 III-1〉 장애영유아 배치 현황(2006년)

단위: 명, %

0~5세아 인구수	장애영유아수 추정	특수 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	통합 보육시설	기관배치 장애영유아 비율	
2,999,461	2%	59,989	1,114	2,129	5,406	3,212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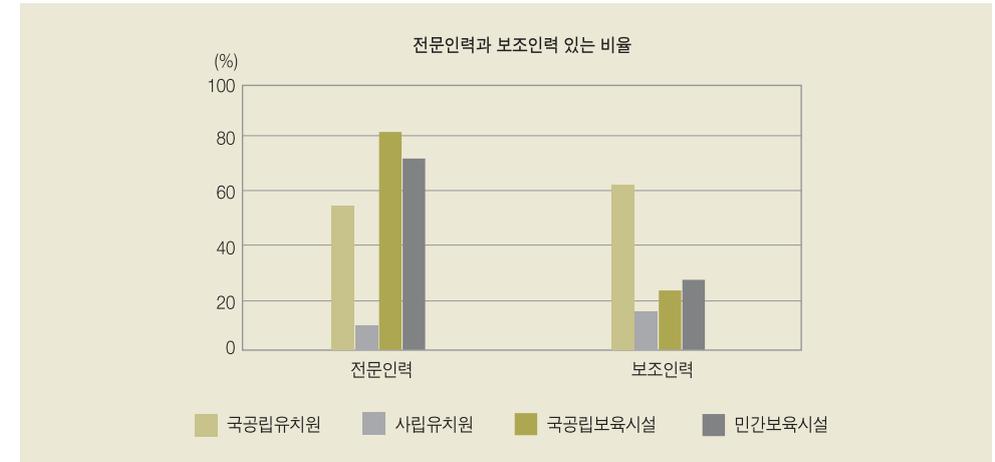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 일관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정부의 지원은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과 사립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름.
- 이념과 제도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은 장애영유아 전담기관 우선으로 되어 있음.

〈표 III-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현황(2006년)

단위: 개소, 명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시설수	아동현원	시설수	아동현원	장애아동 현원
144	5,406	732	48,898	3,212

-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은 전담기관에 비하여 인력지원과 지원인력의 배치 미흡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 보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추세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없어 내실 있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어려움.
-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지원이 다르므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다름.



[그림 III-2]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있는 비율

- 장애영유아 가족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시스템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족이 처음으로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상담할 곳이 없음.
- 장애영유아의 형제자매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없음.
- 장애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 장애영유아 가족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비나 교육비 지출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향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접근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내실화,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나. 세부 과제**

1)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담기관과 통합육아시설 확충
  - 장애영유아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담기관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통합육아시설을 확대, 향후 5년 간 장애영유아의 50%를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홍보를 강화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도 장애영유아 통합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영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전폭적이고 내실있는 지원

- 일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차기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 장애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 경우 육아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을 받도록 함.
  -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에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장애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정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3)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 인력 지원

- 인적 자원 제공
  - 통합육아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향후 5년까지 80%까지 확보하여 장애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
  - 장애영유아 담당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교사가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서 지속

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장애영유아 담당 인력에 대한 질 높은 현직연수 기회를 제공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장애영유아 이해와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전문가 지원 체제를 가동시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4)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체계 확립

-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제도화
  - 지역사회 기존 복지기관 등을 통해 장애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 상담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영유아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함.
- 재정지원
  - 장애영유아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가. 제안 배경**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아지원의 현실상, 아동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양질의 육아서비스가 편중되어 왔음. 기회균등을 위해 농어촌 영유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에 대한 특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농번기·농한기 등 시기별로 균등하지 않은 육아지원 수요 등 전형적 특성과 더불어 소득원의 다양화, 교육과 문화 기회의 상대적 부족 등 지역 여건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해야 함.

〈표 Ⅲ-3〉 농어촌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단위: %

아동모집	차량운행	종일반 교사부족	납부금미납	시설낙후	기타
78.8	63.8	47.5	20.0	23.8	12.5

주: 농어촌 유치원 담당 공무원의 응답임.

### 나. 세부 과제

#### 1)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 등하원 차량지원 및 안전관리를 강화함.
  - 초등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율을 제고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내 공동 운영을 유도함.
  -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유류비 지원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차량 안전교육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초등병설유치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킴.
  - 종일제 시행 확대와 종일반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방학 중에도 종일제 운영방안을 모색함.
-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에 국공립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함.
  -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단기간내 확충을 추진함.
  - 초등학교내 교실을 이용하여 영아보육 및 유아 유치원 시간외 보육을 실시함.
  - 교실구조 및 설비를 보육에 적절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농번기 중 영아보육서비스 지원 확충이 필요함.
- 교육·보육 및 지역주민을 위한 육아·가정·건강지원복합센터를 설치함.
  - 질 높은 유아교육, 영유아 보육, 방과후 교육, 주민 상담 및 교육기능을 위한 복합 센터를 설치·운영함.
  - 복합센터 설치 이외에,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기존 자원을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및 가족 전체에 대한 문화, 언어, 부모 교육을 실시함.

#### 2) 비용 지원 확대

- 교육비·보육료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5세 무상 교육·보육과 농어민 자녀 특별지원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 전원으로 점차 확대함.
- 농번기 취약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 보육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 3) 질적 수준 제고

-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함.
- 농어촌 교사 지원을 강화함.
  - 사립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농어촌 근무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교사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함.
  - 교사 재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함.
- 지역내 유치원간, 보육시설간, 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협력을 장려함.
  - 원아 수가 적어서 실시하기 어려운 차량운행, 행사, 현장학습 등의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 가. 제안 배경

- 보육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그러나 시설보육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정내 보육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아는 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 가정보육도 시설보육화되어 있음.
  - 보육선진국들의 경우 가정보육이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부모의 소규모 개별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파견보육도 지원하며, 보육제공자의 근로자 권리를 보

장함.

- 가정내 양육 지원은 가정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장점임.
- 영아의 부모들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 있음.
- 2004년 조사 결과 단독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혈연 17.5~21.0%, 비혈연 1.4~3.3%임.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I-4〉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2004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혈연	19.6	21.0	17.5	7.7	3.0	0.4	0.3	9.4
동거조부모	7.0	7.4	8.3	4.3	2.0	0.2	0.3	4.1
비동거조부모	11.2	12.3	7.3	3.2	0.6	0.2	-	4.6
친인척	2.5	2.3	2.6	0.7	0.4	-	-	1.2
비혈연	3.3	3.3	1.4	1.0	-	-	0.3	1.1
(수)	(358)	(391)	(422)	(441)	(508)	(493)	(348)	(2,962)

단위: %, 명

- 2005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영아 엄마의 경우도 70.9%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며, 9.34%는 가사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보육시설 이용률은 15.3%임.

〈표 III-5〉 영아 모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 시간제 보육 필요성

구분	상시	매우자주 (주2~3회)	비교적자주 (주 1~2회)	가끔 (월 1~2번)	매우 가끔 (년 1~2번)	없음	계(수)
전체	48.5	10.0	9.42	5.1	5.1	1.9	100.0(882)
취업	60.4	9.41	0.21	7.0	3.0	-	100.0(235)
미취업	44.3	10.3	8.72	8.1	5.9	2.6	100.0(643)
모부재	25.0	-	75.0	-	-	-	100.0( 4)

단위: %(명)

- 영아는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48.5%임.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시간제 보육 요구가 다소 높음.
- 존재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하여 비공식성의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이 필요함.

- 베이비시터 회사나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NGO에 의한 가정내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영역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이나 사후관리 등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나. 세부 과제

- 가정내 보육도우미는 근로자성 보호와 자격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제도를 도입함.
- 시설 영리 베이비시터사업체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고, 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함.

##### 1) (가칭)보육도우미 자격

- 보육도우미는 20세 이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하고 관련 단체가 인증함.
-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별도의 실습으로 구성함. 교육내용은 영아발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위생과 질병관리, 식생활 관리 등,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참조하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함.
-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함.
- 보육도우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을 받음.

##### 2) 보육도우미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가정보육도우미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함.
-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함.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우미의 집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함.
- 보육도우미에게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작성, 보고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함.

- 보육도우미와 아동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 비용은 정부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함. 아동가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이외에, 도우미를 위한 활동지침 및 아동을 위한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도우미와 부모가 지키도록 하여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보호함.

3)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주체

-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 주체는 정부 및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사업체로,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위탁 사업체로 지정함.
-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보편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적어도 동 단위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선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1개소를 목표로 함.

4) 비용 지원

-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이 추진함.
- 정부가 실시하는 보육도우미 위탁 사업체에 최소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함. 보육도우미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료와 운영자 인건비 등을 포함함.
-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함.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가. 제안 배경

- 지난 20년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600만명(1985년)에서 1,000만명(2006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1.9%(1985년)에서 50.2%(2006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취업모 비율 또한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 지속적인 여성경제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들에 비해서 여전히 16% 포인트 가량이 낮은 상태임.
-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30대 초반에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은 취업한 어머니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그림 III-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남성취업자에 비해 낮은 편임.
-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편임.

〈표 III-6〉 성별 비정규직 분포(2002~2006년)

단위: %

	2002년		2004년		2006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여성	66,6	33,4	56,3	43,7	57,3	42,7
남성	76,5	23,5	67,8	32,2	69,6	30,4

- 육아, 가사 등 가정의 양립 부담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남성근로자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혼 여성이라도 육아·가사 등의 요인이 없다면 정규직 취업을 원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표 III-7〉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2005년)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4인	25,6	7,8	24,9	8,3	23,3	7,1
5~9인	60,2	22,4	59,6	23,4	54,6	21,2
10~29인	80,4	39,6	81,1	41,1	70,3	38,1
30~99인	92,2	58,6	92,9	60,8	71,9	55,0
100~299인	94,5	74,7	94,9	75,2	79,1	70,5
300인 이상	98,9	79,6	99,0	79,9	82,3	73,9

- 여성의 학력 수준의 상승과 노동지위의 불안정, 이와 맞물린 맞벌이의 필요는 여성에게 취업과 가정(육아)사이에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욕구가 출산·육아기에도 포기되지 않고 일-가정이 성공적으로 양립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나. 세부 과제

-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각종 세제혜택 등 현재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는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함. 여성취업자의 비정규직화는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들을 함께 지원할 방안 마련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참여 유인 방안을 모색함.
- 영아가 있는 취업모가 집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함.
- 취업모의 소득이 가정의 주소득원인 경우에 대한 부가적 세 제지원 방안을 마련함.

1) 취업모 지원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지속적 확대

- 최근 정착되기 시작한 모성보호 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시킴.
- **이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시간제 육아휴직,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근로자를 위해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시간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육아휴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이 일정 연령에 이르는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세부적 내용을 취업모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재 일률적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급여 대체율이 너무 낮아 저소득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야 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최저선을 책정하고 그 이상의 급여를 소득급간에 따라 저소득층에 높은 비율의 급여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의 변경이 필요함.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시 기업주 부담 경감**

-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에 있어 근로자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의 활용률 제고
  - 우선 지원 대상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
  - 현재 근로자 1인당 매월 20만원~5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육아휴직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

세 감면 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사용주에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시키는 방안 필요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안되었던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관련 기업 인센티브,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과 같은 직장문화 개선 관련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킴.

#### 2) 취업모 자녀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설치를 망설이는 미설치 사업장,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각 사업장의 규모와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으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무조건적 시설 설치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이 시행하는 보육시설 위탁 또는 수당 지원 또한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도록 함.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나 수당지급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권장 수준에 불과하므로 보다 강력한 법조항,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
-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영아가 있는 취업모를 위해 질 높은 영아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시킴.
  - 영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믿을만한 기관의 부족 때문에 시설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와 양적 확대가 동시에 요구됨. 이를 위해 영아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영아반 구성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함.
-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 주변의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보육도우미 파견 제도를 도입, 취업모의 가정내 영아 보육

을 지원함.

#### 3) 세제 지원 확대

-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마련함.
  -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시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마련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소득보전을 가능케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함.
  -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보육수당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함.

#### 4)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제도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취업 여성 중 자영업 종사자, 무급가족업 종사자, 임시직 종사자, 일용직 종사자는 이들 지원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여성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함.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등을 완화하여야 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가 신청시 1년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완화되어야 함.
    - 비정규직 여성이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계약기간이 끝날시 계약기간 종료시점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권을 출산시점의 계약기간내 존재여부에만 의존하도록 함.
  - 자영업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휴가 및 휴직 개념의 적용이 곤란한 취업모에 대해서는 가구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보육도우미 이용 우선권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 가. 제안 배경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분담률은 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특히, 유아교육·보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공립시설을 확보하여, 국공립 대 민간의 적정한 수준의 원아 분담 비율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국공립시설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대기 아동도 많아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및 민간시설의 반대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이 미흡한 실정임.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이 육아지원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과 민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

〈표 III-8〉 연도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단위: 개, 명

연도	유치원 수(학급수)			유치원 원아 수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2002	8,308(21,493)	4,240(6,012)	4,089(15,481)	550,150	119,632	430,518
2003	8,292(21,839)	4,284(6,122)	4,008(15,717)	546,531	121,322	425,209
2004	8,246(22,046)	4,328(6,266)	3,918(15,780)	541,713	123,906	417,807
2005	8,275(22,409)	4,412(6,451)	3,863(15,958)	541,603	124,283	417,320
2006	8,290(23,010)	4,460(6,588)	3,830(16,422)	545,812	121,324	424,488

〈표 III-9〉 연도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단위: 개소, 명

연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2002	22,147	1,330	12,679	199	7,939	800,991	103,351	597,971	8,730	90,939
2003	24,142	1,329	13,644	236	8,933	858,345	103,474	640,545	10,391	103,935
2004	26,903	1,349	14,728	243	10,583	930,252	107,335	691,343	11,787	119,787
2005	28,367	1,473	15,243	263	11,388	989,390	111,911	734,554	12,985	129,940
2006	29,233	1,643	15,405	298	11,887	1,040,361	114,657	761,688	14,538	149,478

- 국공립기관은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보편적 교육·보육프로그램 및 표준교육·보육프로그램 외에도 아동 및 지역 특성화프로그램, 취약교육·보육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추가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육아와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 중 하나임.
  - 「새로마지플랜 2010」(2006. 7)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함.
  - 「새싹플랜」(2006. 7)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와 이용아동수를 보육시설수의 약 10%, 아동수의 약 20%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함.

### 나. 세부 과제

#### 1)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및 단설유치원 설립

-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1~2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2~3 학급 이상으로 확대함.
  - 대도시 및 신규택지개발지역 등 유아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함.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
  -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유아의 교육기회를 제공 및 확대함.
  - 종일제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 기회를 확대함.
- 유치원 부족 지역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우선 설립함.
  - 공급률과 이용률의 불균형으로, 유치원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 중 저소득밀집지역이거나 택지개발지역에 설립함.
    - ※ 단, 지역내 사립유치원 및 타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현황을 감안함.
  -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2010년까지 100% 종일제 운영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등 지역내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함.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확충
-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강화
  -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30%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중앙정부가 직접 신축 조직 설치 및 비용 전액 부담 후, 지역에 무상 임대 및 위탁 운영을 의뢰함.
- 신축비 지원 없이 건물 확보 및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확충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함.
  -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우체국,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함.

3)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

- 장애아 통합교육 서비스 우선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일반학급과의 연계 통합교육을 활성화함.
- 포괄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서비스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교육·보육 격차 해소 및 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한 포괄적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내 거점 센터로서 운영 모형 기능 수행
  - 단설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내 소규모 기관이나 민간시설에 운영 모형을 제공하고,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함.
  -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표준적인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지역내 육아지원센터로서 가정·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가. 제안 배경

-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한해 약 3조원에 이룸.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기본보조금 제도가 채택된다면 앞으로 재정지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공적 재정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의 제고는 국가 지원 정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임.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의존도가 높으므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민간기관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임.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재정 및 교육·보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그 운영을 관리·지도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나. 세부 과제

1)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

- 유치원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
  - 유치원평가제도의 전면 도입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 교사처우개선비, 종일제 지원비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함.
-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함.
  - 현행 학교법인 조건을 완화한 법령과 제도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표 III-10〉 법인화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구분	찬성	반대	계
의견수	248	171	419
비율	59,2	40,8	100,0

단위: 명, %

- 사립유치원 운영의 재무 회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 차원의 행정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한 예·결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함.

2)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 평가인증의 결과와 재정 지원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통과 여부에 따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농어촌), 인건비(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 기본보조금 지원 또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보육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 법인 출연금 등에서 현행 사회복지 법인 요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법인전환을 유도함.

〈표 III-11〉 보육법인 활성화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장의 의견 단위: 명, %

구분	찬성	반대	계
의견수	226	103	331
비율	68.9	31.1	100.0

-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해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개토록 함.
- 2007년 구축된 보육행정 전산화 체제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수시 점검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결산 공개를 유도함.
-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지원 민간보육시설은 여타의 정부미지원 자율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임.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가. 제안 배경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 도입이 논의된 배경은 이들 기관의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과 공적재정 투입의 불공평성에 있음.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정부 재정 투입의 차이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 이용 아동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기초함.
- 2006년부터 기존 영아보육지원을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하고,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가격규제 예외시설 도입을 검토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 재정배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계층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두자는 것임.
-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비는 1985년에 이미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교육비 자율화가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님. 따라서 유치원의 자율적 선택으로 가격규제와 기본보조금 수용이 가능함.

나. 세부 과제

1) 개념 및 적용 방법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시설에 차등보육료 이외에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설임.
- 가격규제 예외는 영아와 유아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 단위로 실시함. 이 경우 가격규제 예외 보육시설은 영아보육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
- 가격규제 예외 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민간보육시설이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분리됨.

2) 실시 시기

-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3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시·군·구 신고제로 가격 상한선을 적용 받지 않는 보육시설을 허용함.
- 기본 공공 인프라 확립 없이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임.
- 가격규제 예외 시설에 대한 독점적 제어 수단으로 작동함.
-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함.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가. 제안 배경

- 최근에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이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그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였으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상당부분은 주로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사립·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표 III-12〉 보육료 지원 아동수(2006년)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총계
전체	223,700(63.9)	442,943(64.2)	666,643(64.1)
차등지원	186,655(53.3)	277,212(56.4)	463,867(44.6)
두자녀	37,045(10.6)	26,700( 3.9)	63,745( 6.1)
만5세아	-	139,031(70.0)	139,031(13.4)

주: 만5세아의 비율은 만5세아 대비 비율임.

〈표 III-13〉 유아교육비 지원 아동수(2006년)

단위: 명, %

구분	아동수	해당 원아 대비 비율
전체	317,000	58.7
차등지원	162,000	65.2
두자녀	10,000	1.8
만5세아	145,809	50.2

- 전반적으로 낮은 육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립·민간 육아시설에 기본보조금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음.
- 우리나라 육아시설은 사립·민간시설이 다수이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함. 특히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시설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준설비 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많고 민간시설 교사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 민간 시설 서비스 수준이 낮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불공정한 재정 지원에 있음.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확보되는 교육·보육 비용, 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민간 육아지원기관의 낮은 서비스 수준의 원인이 됨.
-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용 기관 유형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육아시설 이용 비용의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지원책은 계속 확대 추진하고 시설별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이 없는 지원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나. 세부 과제

1)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체계 보완

- 현행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보다, 정부의 소득과약 능력을 제고하여 소득계층간에 보다 형평성 있고 정교한 차등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함.

2) 보편적 지원의 발전 확대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부모와 아동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육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증진시킴.

3)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체계 유지

-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로 시설별 지원 수준을 유지함.
-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취약보육 등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4) 재원 확보

-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로 스웨덴은 25년간 보육세 제도를 두었음.
-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분담률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감안, 차등화 함.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가. 제안 배경

1) 유치원평가제도

- 정부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이 학교로서 책무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유치원평가제도를 도입함.
- 나아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유아교육진흥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학부모들에게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기관 선택을 지원함.
- 유치원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유치원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정부는 유치원 현장 실태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임.
-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학지도와 함께 기관 운영 평가를 통해 기관의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
- 학부모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이 반영된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기관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임.
- 유아는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적 자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

〈표 Ⅲ-14〉 유치원평가 대상기관 수(2008~2010년)

구분	전체	2007(시범)	2008	2009	2010
계	8,290	100	2,470	2,470	2,470
국공립	4,460	50	1,470	1,470	1,470
사립	3,830	50	1,000	1,000	1,000

단위: 개원

주: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연도별 평가 참여 유치원 수는 변동 가능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개별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전제로, 자체점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게 됨. 또한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 수준을 평가하게 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됨.
-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함.

〈표 III-15〉 전체시설 대비 평가인증 참여시설 현황(2005~2007년)

지역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시설수
전체시설수(A)	1,643	1,475	298	11,828	59	13,930	29,233
참여시설수(B)	1,496	1,796	143	3,924	29	4,480	11,868
비율(B/A×100)	91.1	121.8	48.0	33.2	49.2	32.2	40.6

- 사립유치원 중 유치원평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유치원은 57.0%, 민간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설은 56.4%로 나타남.
- 부모들 역시 유치원, 보육시설 선택 시 환경구성, 교육·보육 프로그램, 원장/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성 등을 중요 선택요인으로 보고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고 도출 대책이 필요함.

**나. 세부 과제**

1) 유치원평가제도의 도입과 정착

가) 유치원평가제도 도입

- 유치원평가제도는 2007년 시범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평가제도가 유아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제 1차 시행에서는 전국의 국공립, 사립유치원들의 참여와 현장의 제도 수용이 중요함. 따라서 유치원들이 평가의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지표는 유치원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관련 전문가, 유치원 현장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로 평가참여를 장려하고 평가시스템의 효용을 제고시켜야 함.

나) 유치원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 유치원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효율화 함.
- 유치원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전반적인 수준은 물론 영역별 수준을 분석하여 장학시스템과 연계함.
- 특히 개개 유치원들에서 평가점수가 낮았던 영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을 실시함.

다) 중앙정부 및 지역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 유치원평가는 현재 지역별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초기 평가제도 개발 과정에서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개발됨. 즉, 평가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간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음.
- 중앙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활용을 대비하여 점검하여야 함.
-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시범운영이 끝나고 2008년도부터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 평가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이 일반지표 및 지역별 지표의 개발, 효율적 운영체계 모색 등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 제1차 시행시기(2006~2009)를 마무리 하고 제2차 시행시기(2010~2013)의 원활한 운영을 준비함.
- 제1차 시행시기의 운영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성과가 나타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평가한 후 제2차 시행시기를 준비,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1차 시행시기(2006~2009)에서는 현재 40.6%로 나타난 보육시설들의 참여율을 80% 수준까지 높이도록 함.

※ 이를 위해 보육시설종사자들로 하여금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의 다양한 노력, 평가인증 참여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증결과의 적극적인 홍보, 정부 예산지원과 인증결과의 연계 등을 활용함.

- 제1차 시행시기에 활용된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후 제2차 시행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를 준비함. 특히 평가인증지표 개선을 통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들의 질적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후관리체계 구축

- 매년 상시 8,000~10,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상시 20,000~22,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실시되어야 함.
- 사후관리는 대상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시설관리로서 인증시설, 유보시설, 불인증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인증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인증시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 상근·비상근 현장관찰자, 인증심의위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현장관찰자의 경우 참여 보육시설로부터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함.

다) 지역사회 보육인프라와의 협력체계 강화

- 평가인증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역내의 보육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력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지역사회 성공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함.
-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은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참여과정 등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증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증통과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혹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라) 보육시설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함. 우선 2010년부터 기본보조금과 평가인증을 연계함. 이로써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함.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가. 제안 배경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 5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 제 5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합의에 의한 최대 52시간을 연중 내내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III-16〉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근무시간(1일 기준)(2007년)

구분	평균근무시간	토요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전체	10.1	5.6	4.9
국공립	10.1	5.7	4.6
법인	10.3	5.6	5.4
민간개인	10.2	5.5	3.6
가정	9.5	5.6	11.0

단위: 시간

- 교사의 추가 배치는 곧바로 인건비로 인한 교육·보육 비용 상승과 연계되므로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하여야 하는가가 관건임.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 교사의 사기와 이직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과 보육의 질로 직결됨.

〈표 III-17〉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단위: 만원, %

경력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	국공립 대비 비율
5년 이하	2,372	1,214	51.2
6~10년차	2,756	1,553	56.31
1~15년차	3,090	1,608	52.0

-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육교사도 이와 비슷한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실제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움.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점심시간도 영유아들의 식사지도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 중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제 73조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특히 보육시설 교사는 1년에 여름 겨울 각각 2~5일 정도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 임산부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유치원교사는 출산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음.

**나. 세부 과제**

1) 교사 근무시간의 정상화

- 8시간 근무시간제 도입을 위한 교사 인력 배치 지원
  - 유치원의 경우 711개원 2,573개 학급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급당 종일반 교사 1인 즉, 2,573명의 종일반 지원 교사가 추가 배치되어야 함.
  - 보육시설은 10시간 이상 운영 시설이 24.1%로 29,233개소 대비 7,045개소임. 1개 시설에 1인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7,045명의 지원교사가 요구됨.

2) 교사 지원인력 수급 제도 마련

- 대체교사 제도 확립
  - 교사의 휴가나 연수 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
- 지원인력 제도 확립
  -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 영유아의 급·간식을 담당하는 취사부 등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함.

3) 교사 급여의 현실화

- 기본적인 교사임금의 현실화
  - 사립유치원 교사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8시간 기준 일일 27,840원, 월 환산 727,320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들이 하는 일의 강도와 근로시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함.

4) 교사 휴가 사용의 제도화

- 교사가 출산휴가 및 연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분위기 마련
  - 보육교사가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해야 함.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가. 제안 배경**

-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실제로 교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함.
-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서비스 제공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에서는 추가 인력없이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기관의 청소, 영유아들의 배식준비 및 뒤처리, 여러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함.

-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배식준비, 행정사무, 기타 잡무를 수행할 지원인력이 필요함.

**나. 세부 과제**

**1) 교사 지원인력의 배치**

- 따라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대상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배치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인력의 유형으로는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부 및 취사부 지원 등임.

〈표 III-18〉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개요

	유치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대체교사	· 8,290개원의 이용률 50%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실태의 1/2를 적용하여 1개 원당 연인원 50명 적용	· 전 시설의 이용률 73.2%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실태의 1/2를 적용하여 1개 시설당 연인원 50명 적용
청소부(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취사부(1인) (종일반 운영 기관에 지원)	· 국공립유치원: 122개원 · 사립유치원: 589개원	· 민간개인보육시설 14,287개소 <sup>1)</sup>

**가) 보조교사 배치<sup>1)</sup>**

- 교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고 있음. 상시 추가 근무시간 8시간 준수를 위해 전일 근무 보조교사가 지원되어야 함. 영유아 교육·보육이란 영유아들

1) 일본의 경우 보육사 운영은 기준보육사, 예비보육사, 가산보육사로 운영되고 있음. 기준보육사란 일반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사로 보육사대 영유아 비율은 0세아 1:3, 1~2세아 1:6, 3세아 1:20, 4~5세아 1:30임. 동시에 모든 시설에 시설 구분없이 예비보육사 1인을 지원하여 비담임교사로 활용하고 있음. 가산보육사는 장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산후지원, 간호보육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임.

을 그날그날 돌보아야 하고, 만약 교사들이 아프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을 한 다하더라도 시간을 미루어 업무를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므로 상시 보조교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보조교사는 종일반 교실 담임교사들의 추가근무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담임교사가 반을 비우게 되는 경우 반을 담당할 수도 있음. 즉, 변동근무제 시 반 운영 담당, 기관의 행·재정 업무 담당, 평가(인증) 준비 담당, 원장·시설장 업무지원, 종일반 지원, 영아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
- 전체 기관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함.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농어촌 소재 기관 등으로 함.

**나) 대체교사 배치**

- 대체교사 지원은 현행 보육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기초하여 1일 6시간,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시 하루 35,000원, 월 800,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동일시설의 초임 인건비를 지급기준으로 함.
- 유치원 대체교사 추계
  - 유치원의 대체교사 활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략 50% 수준으로 대체교사 배치를 계획하면, 8,290개원에 연인원 145,075명이 배치되어야 함.
- 보육시설 대체교사 추계
  - 보육시설의 경우 대체교사 활용률 73.2%를 고려하면, 연인원 386,290명의 대체교사 지원이 요구됨.

**다) 청소부와 취사부 배치**

- 모든 육아시설에 상시인력으로 청소부와 취사부를 지원함. 다만 현재 취사부가 지원되고 있는 국공립기관은 제외함. 소규모 시설에서는 청소부와 취사부를 겸직함.
- 유치원의 경우
  - 모든 유치원에 청소부 1인을 배치함.
  - 종일반을 운영하는 122개 국공립유치원과 589개 사립유치원 즉, 총 711개 유치원에 취사부 1인을 배치함.

#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사업 2006~2007

- 보육시설의 경우
  - 전체 보육시설에 청소부 1인을 배치함.
  - 가정보육시설 11,828개소에서는 청소부와 취사부가 겸직하도록 함.

## 2) 교사 수급관리체계 구축

- 교사 지원인력의 원활한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보육정보센터의 교사 수급 기능을 지원인력 수급관리 기능으로 확대함.
  - 지역사회내 현재 인력 수급관리를 하고 있는 기구를 통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지원인력 수급관리 기능을 맡게 할 수 있음(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용).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지원인력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질적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게 됨.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인력의 활용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임.

### 연구 및 집필

이 옥(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유희정(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장명림(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미화(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은실(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신나리(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김은영(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정원(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윤진(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 ❖ 연구

### 2006년

#### ■ 기본연구과제

##### ○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제도 비교
- 선진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사례 검토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에 대한 의견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대안적 모형(안) 개발 및 방안 제시

##### ○ 저문

곽노의 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회장  
 권옥자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연구관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 · 박찬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  
 서소정 경희대 교수 ·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 · 심혜영 기획예산처 사무관  
 오경희 미래유아교육학회 ·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 ·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  
 이영 연세대 교수 · 이완정 인하대 교수 · 이윤옥 서원대 교수 · 이종희 동덕여대 교수  
 임재택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 조복희 경희대 교수 ·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  
 최양미 안양대 교수 · 최한경 기획예산처 서기관 · 한유미 호서대 교수  
 황건수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사무관

##### ○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 개념 정립
- 공공성 추진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현황 파악